축산농가 피해 최소화 예비비 투입

전북도, 2억9000만원으로 소규모 양돈 농가 등에 폭염 장기화로 인한 가축 스트레스 완화 약품 지원

전북도는 폭염이 장기화됨에 따라 도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 예비비 2억800만 원을 투 입, 소규모 양돈 농가 및 닭·오리 사육농가에 가축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약품을 지원하기로 하고 6일 14 개 시군에 자금을 긴급하게 교부 했

지원대상은 폭염에 취약한 닭, 오 리, 돼지 등을 사육하는 농가로서 돼 지는 1천두 미만, 닭 1천~5만수 미 만, 오리 1천~3만수 미만을 사육하 는 소규모 820여 농가가 대상이다. 이번 예비비 긴급 투입은 연일 계 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가축피해 예 방을 위한 긴급대책으로, 폭염을 특

방을 위한 긴급대책으로, 폭염을 특별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관련대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방침과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송하진 지사의 주문에따른 것이다.

도는 매년 약 11억원 정도의 시업 비를 확보하고 가축사육환경개선을 통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2014년 도부터 3000여 개소 노후 축사에 환 풍기, 안개분무기, 자가발전기, 제빙 기를 설치하는 등 폭엽대책을 추진 하여 왔다.

최근 들어 폭염이 연례적 장기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규정하자는 정부 움직임에 발맞춰 내년에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가축 사육환경개선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폭염이 시작되기 이전인 상반기중에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가축 스트레스완화제 공급을 위한 사업비를 예산에 확보하여 가축 에너지 공급 및 면역력 향상을 통한 가축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시설이 열악한 축사일수록 가

축 폭염피해가 많은 만큼 축사시설 개선을 위한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및 축사 온습도 제어 등 최적의 사양 관리를 위한 ICT 융복합 축사시설 지 원사업 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도 관계자는 "폭염 기간 중 전기수 요 급증이 예상되므로 정전 및 축사 내 환풍기 등 전기장치 과열에 의한 축사 화재 예방에 주의하고 특히, 축 사 내 안개 분무 및 철저한 환기, 차광막 설치, 축사지붕 물 뿌리기, 깨 끗한 물 급수 등으로 가축의 스트레 스를 최대한 예방하여 폭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의 철 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여성농업인전북연합회 임원들과 함께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6일 도청접견실에서 이미옥 한국여성농업인전북연합회장, 한국여성농업인전북연합회 임원 들과 함께 폭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상황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수상레저기구 · 인명구조용 장비 점검

전북도, 13일까지 군산 · 부안해경과 합동으로 지난 6월 중 시정지시사항 이행여부도 점검키로

전북도가 여름철 수상레저 활동 성수기를 맞이해 내수면 유선 및 수상 레저사업장의 수상레저 기구와 인명 구조용 장비 등에 대해 특별 안전점 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1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 은 무주군 등 7개 시군 9개소에 대해 도 및 해당 시·군, 군산해경, 부안해경 등이 참여해 합동으로 실

도는 지난 6월에도 해경 합동으로 수상레저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구명조끼 등 노후화된 인 명구조용 장비에 대한 시정 조치 지 시 및 사업자에게 안전조치에 대한 법적 준수사항을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당부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점검에서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내수면 유선 및 수상레저사업 등록기준 적정성 여부, 수상레저사업장에 설치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수상레저 사업자 안전조치에 대한 여부 등 안전과 직결된 사업장 관리 및 장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함과 동시에 지

난 6월중 시정지시사항 이행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조치, 안전 위해 요소 등은 해당 시군 책임 하에 보수보강하여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안전위해 요소 등을 사전에 조치하고관리함으로써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수상레저 인구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사고발생 우려 및 안전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내수면 수상레저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문 대통령, 신임 비서관 6명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집권 2년차 조 직개편에 따른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6명을 새로 임명했다.

정의대에 따르면 이날 임명된 신임 비서관은 ▲자치발전비서관 민형배 전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시민참 여비서관 정현곤 현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 ▲사회조정비서관 강문대 현 법률사무소 로그 대표변호 사 ▲제도개혁비서관 김우영 전 서울 특별시 은평구청장 ▲정책조정비서 관 김영배 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 자영업비서관 인태연 현 한국 중소상 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회장 등 6명이

신임 비서관 인선에서 참여정부와 인연있는 인사가 다수 발탁된 점이

대통령의 국정철학, 이 연설문에

청와대는 6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지후 취임 1년 동안의 국정운영과 철학이 담긴 대통령연설문집을 2만부를 발간한다. 발간집은 공공기관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전자책으로도



가. 청와대는 이날 보

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발간집은 지난해 당선 직후 인 5월 10일부터 올해 5월 9일까지 취임 1년 동안 대통령의 각종 행사 연설과 주요 회의 발언을 담고 있 다.

총 1030쪽 분량이며 연설문집 '문 재인 대통령 연설문집'과 단행본 '문재인 대통령 말'글집 - 완전히 새로운 시작'으로 구성된다. 단행본은 방대한 분량의 연설문집을 쉽게 접하기 위해 따로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연설문집엔 주요 SNS 메시지도 실려 역대 대통령 연설문집 중 가장 많은 분량인 것으로 알려

연설문집 상·하권엔 대통령의 주 요 연설문이 수록됐으며 별권에는 국무회의와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 관 회의 주요 모두 발언을 담고 있 다. 남북 정상회담, 평창 동계올림픽 등 주요 행사에 대 한 사진도 함께 수 록됐다.

어울리 이번 연설 문집은 총 6000부 가 제작돼 입법· 사법·행정부, 자 치단체, 교육기관, 국공립 도서관, 대 학 도서관 등 공공 기관에 배포될 예

정이다.

또 국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시법·행정부, 자치단체, 교육기관, 국공립 도서관, 대학 도서관 등 다중 이용시설에는 2만부가 배포될 계획이다.

이번 연설문집은 전자책(e-PUP) 으로도 제작돼 무료 배포된다. 특 히 연설문집 전자책에는 대통령 의 연설 동영상 66개도 함께 수록 됐다.

전자책은 이날부터 청와대와 문체 부 누리집(홈페이지), 국·공립 대 학 도서관 홈페이지, 대형 온라인 서점(리디북스, 알라딘, 예스 24, 교 보문고)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또 각 페이지 상단에는 시각장애 인을 위한 음성 변환용 바코드를 설치해 국립점자도서관, 한국점자 도서관에서도 음성도서 형태로 이 용 가능하다. /뉴시스

ARF "완전한 비핵화 촉구··· 안보리 결의 이행"

'완전한 비핵화'표현… 한반도 정세 반영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이 6일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추가적인 핵미사일 실험 금지를 공약 하라고 촉구했다.

올해 ARF 의장국인 싱가포르는 지난 4일 개최된 ARF 외교장관 회의 내용 을 토대로 이날 발표한 의장성명 최종 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장성명은 우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 문점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 령과 김 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 공 동성명을 환영한다"며 "관련국이 판 문점선언과 북미 공동성명의 충실하 고 신속한 이행을 포함한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의 실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

의장성명은 그러면서 "북한이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와 추가적인 핵·미사일 실험 금지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의장성명은 또한 "지역 내 평화와 안 정에 기여할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의장성명은 더불어 "일부 장관들은 북한 인권 문제 등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제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올해 의장성명에는 지난해 의장성명에 담겼던 'CVID'라는 표현이 적히지는 않았다. 대신 판문점선언과 북미 공동성명에 명시된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넣었다. 이는 'CVID'가 자국에 적대적인 시각을 내포하고 있다는 북한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다.

